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7. 8. 3.

## I. 회의개요

○ 일 시 : '17. 7. 27(목) 12:20 ~ 13:30

○ 장 소 : 정부 서울청사 9층 소접견실

○ 출석위원(9명)

- 주재 : 김지형 위원장

- 참석 : 김영원·김원동·김정인·류방란·유태경·

이성재·이윤석·이희진 위원

## II. 상정안건(총 3건)

○ (2-1, 의결) 1차 조사 방향

○ (2-2, 보고) 신고리 5, 6호기 관련 국민 소통방안

○ (2-3, 보고) 제1차 회의록

### Ⅲ. 의안 심의

#### ① 1차 조사 방향

- (간사) 금일 1차 조사규모를 선정해주시면 1차 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 위원) 역으로 간다고 할 때 적절한 숫자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시민배심원단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시민배심원단’ 이 용어를 계속 쓰는 것인지?
- (○○○ 위원) 현재로서는 이름을 잠정적으로 쓸 수 밖에 없을 것 같음
- (○○○ 위원) 시민 분들이 결론을 내시는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100, 200 수준보다는 300, 400명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그 규모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1차 조사 규모도) 정해지지 않을까 싶음
- (○○○ 위원) 일본의 경우 토론회 참석자가 286명으로 이것보다 크게 한다고 하면 최대 400명 정도일 것이라고 봄. 참여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가 실제 구축할 수 있는 패널 규모도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간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있음

- (○○○ 위원) 1차 조사 규모는 응답자 기준인지?
- (○○○ 위원) 그러함. 실제 조사에 참여한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접촉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임
- (○○○ 위원) 예컨대 접촉률이 80%, 응답협조율이 30%라면 1만 개의 전화번호를 돌렸을 때 2,500명 정도가 응답하는 것임
- (○○○ 위원) 1차 조사규모의 3배수 또는 4배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접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함
- (○○○ 위원) 350명 정도면 (1차 조사 규모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 (지원단) 최종 응답자는 일본 사례가 285명이고, 캘리포니아 사례가 412명이었음. 참여율을 보면 일본이 5% 정도로 알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5% 정도로 생각하면 350명이 되기 위해서는 7,000명이 있어야 함. 다만 일본·캘리포니아는 처음부터 이것을 정하고 간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한 사람 중에서 동의한 사람들이 온 것임. 따라서 T1(1차 조사)과 T2(2차 조사)의 분포가 맞지를 앎고, 우리는 T1과 T2를 맞추려면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00명 규모보다 더 늘어야 된다고 봄. 7,000명 규모를 몇 배로 올려야 할지는 논의 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음
- (○○○ 위원) 최종으로 350명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배심원단으로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사람 숫자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닌지?

- (지원단) 그러함. 500여명이 참가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임
- (○○○ 위원) 1만 5천명 내외가 맞을 것 같음
- (○○○ 위원) 500명에서 (토론회 참석) 동의률을 5%가 될 것으로 가정하면 1만 명인데, 5천 여명 정도 추가하면 1만 5천명임
- (○○○ 위원) 1만 5천에서 상위로 구간을 잡아주시는게 어떨까 함. 1만 5천~1만 7천, 8천 정도로.
- (○○○ 위원) 그럼 1차 조사 규모는 1만 5천~2만 명으로 하고, 500명 중 숙의과정 참석 후 최종 조사 참여자수는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350명 안팎으로 이야기하려고 함
- (지원단) 일본이나 캘리포니아는 참여율이 75%가 넘었고, 저희도 500명 정도로 잡으면 350명 이상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봄
- (○○○ 위원) 그럼 목표참여자수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음
- (○○○ 위원) 1차 조사는 할당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지? 무작위 샘플링으로 갈 것인지?
- (○○○ 위원)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확률추출방법을 할 수 있음

- (○○○ 위원) 조사방법은?
- (○○○ 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지만 한 5% 정도가 휴대전화가 없는 유권자라고 얼추 짐작을 하고 있음. 휴대전화 가상번호만 100% 쓰면 방법상은 훨씬 유리하지만 그 5%에 해당하는 분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임
- (○○○ 위원) 유선으로 하면 그 부분은 확률추출이 안됨. 집으로 전화해서 가구원 중 한 명을 랜덤하게 뽑아야 됨.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들이 (집전화를 통한 조사에) 걸린다는 보장도 없음
- (○○○ 위원) 실무진에서는 몇 % 정도까지 안을 가지고 있는지?
  - (지원단) 실제 집전화가 있는 분들이 45%고 휴대전화가 95%라고 한다면 그 분들이 중복될 가능성이 휴대전화가 없는 5%가 답변할 가능성보다 크다고 봄
- (○○○ 위원) 섞는 것이 나을 것 같음. 기술적으로는 어려울지 몰라도 특정 집단이 배제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 위원)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1차 조사 규모 관련 1만 5천~2만으로 하기보다 2만명 수준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함. 어느 한쪽 지지율이 높게 나올 때 표본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지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
- (○○○ 위원) 좋음

## ② 국민소통 방안

- (간사)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쟁점에 맞춰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음. 현장토론회는 찬·반 양측의 전문가와 청중이 별도의 장소에 모이는 현장토론회를 실시하겠음. 기자간담회는 찬·반 전문가의 상반된 의견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음. 이외에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 (○○○ 위원) 8월 1일 토론회는 준비가 완료된 것인지? 갈등학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학회와는 얘기가 된 것인지?
  - (지원단) 참석자, 시간 등에 관해서 학회와 지원단이 협의해서 준비를 하였음
  
- (○○○ 위원) 대체적인 프로그램은 나온 것이 있는지?
  - (지원단) 주제발표자, 발제는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찬·반 전문가들은 공론화위원회가 추천을 하는 것으로 했음
  
- (○○○ 위원) 제대로 된 공론화 또는 공론화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받고 토론도 해서 공론화가 어떻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할 것으로 들었음

- (지원단) 첫 번째 토론회의 목적은 공론화에 대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논의하고 하는 취지임
  
- (○○○ 위원) 첫 번째 현장토론회이고 주최자인 것인지 아니면 현장토론회에서 빠지고 학회 행사를 후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지원단) 주최는 아니지만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좋은 취지가 있어 후원을 하는 것임
  
- (○○○ 위원)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시는 것도 관찮은 것 같음